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이뤄내자!

총선에서 패한 것은 노동자운동 민주노총의 진보당 사수 ... 결과는 지도력 훼손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패배했으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정 패배한 것은 노동자운동이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사회정책이 쟁점이 되지 못한 선거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운동 세력의 총선 요구가 큰 힘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수 운동진영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포기해버린 결과 민중의 목소리가 더 희미해져버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사회 원로들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걸로 달려가 검찰독재에 맞서자고 부르짖었다. 진보당은 위성정당에 들어가 민주당과 연합했고,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정한 정치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결국 산별연맹이 제각각 정치방침을 수립하면서 민주노총의 지도력 자체가 훼손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각종 선거에서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이번 총선 한 번으로 이르게 된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은 그 시작부터 민주당 세력과 연합하여 반보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연합론과 대립해왔다. 지금 노동자정치세력화 시도가 대연합론으로 더욱 급격히 휩쓸리게 된 보다 큰 이유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사회 전망을 제시하겠다는 정치운동의 기획을 완성하지 못한 데 있다. 운동의 쇠퇴가 운동을 대연합론으로 이끌고, 대연합론은 운동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은 노동자·민중의 우군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러내는 극우적 색채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기득권 거대정당은 서로에게 "내 똥 보다 재네 똥이 더 더럽다"며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극우 세력이 성장한 토대는 자신의 과오를 자성하지 않으며 상대만 악마화하는 정치의 양극화이며, 여기에서 민주당 세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간혹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친화적이라고들 여기지만 그 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견, 복수노조, 최저임금 등 노동개악을 주도한 친자본 정당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 법인세, 증부세를 감세해 부자들을 도왔다.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은 임금인상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감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정권 심판, 누구의 힘이냐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신자유(보수)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채 감세, 정부 지출 축소,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이에 방해되는 노조파괴를 정책의 1순위로 시행해왔다. 정부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세수는 그보다 더 많이 줄여 정부 부채 규모만 키웠다. 산수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탓에 경제성장률은 미국·일본에게 뒤처졌고, 노동자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민생 위기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극우적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극우적 언사를 내뿜으며 극우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은 힘으로 제압해야 평화'라며 도심 열병식을 전개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도심을 순찰하는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다. 사회의 우경화 뿐만 아니라 전쟁위기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노동자·민중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대열에 누구와 함께 설 것이냐다. 민주당과의 연합을 선택한 세력까지 함께 선다면, 이 대열 안에서는 곧 민주당, 조국혁신당까지 확장해 연합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 스스로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세워내지 못한 채 대연합전선으로 뛰어든다면 노동자·민중의 의제가 사라졌던 이번 총선과 똑같은 결과에 닿을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전투구에 휩쓸리지 않도록 운동 진영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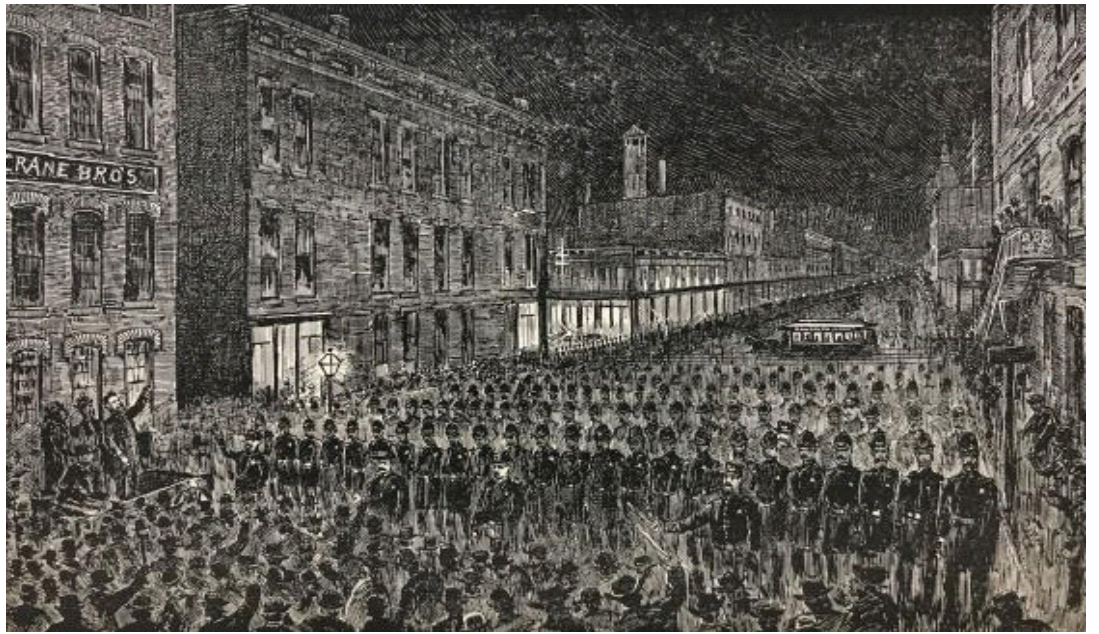
노동자가 알아야 할 세계노동절 역사

"하루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을 보장하라"

1800년 대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했고,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국제적 노동조직 「인터네셔널」은 일찌감치 1일 8시간 노동제를 노동자계급의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에서도 8시간 노동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1885년에는 노동조합연맹(미국노동연맹의 전신)이 1886년 5월 1일에 총파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연맹은 8시간 노동일 운동을 제안만 했을 뿐 5월 1일이 가까워졌을 때까지도 전국적 파업을 단행할 힘을 갖지 못했다.

5월 1일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것은 국제노동자협회와 노동조합연합이었다. 백인, 남성, 숙련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연맹과 달리 국제노동자협회와 노동조합연합은 이주, 비숙련, 흑인, 여성 노동자가 주축이었다. 8시간 노동일은 낮은 임금에 오랜 시간 일하고 있던 국제노동자협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더 절박한 과제였다. 두 단체의 차이는 1886년 5월 1일을 한 주 앞둔 부활절 행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노동조합연합은 시



카고 병기고에서 실내 연설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들고 미국 국기를 불렀다. 국제노동자협회는 시카고 호숫가에 1만 5천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연설은 영어 뿐만 아니라, 독일어, 체코어로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적기(赤旗)를 들고 프랑스 혁명가 라 마르세예즈를 불렀다.

그러나 1886년 5월 1일에 국제노동자협회의 주도로 미국 전역에서 3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이

단행되었다. 참극은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시카고는 국제노동자협회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국제노동자협회가 주최한 집회 중에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 6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음 날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헤이마켓 광장에서 열렸다. 밤 10시가 넘어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지고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졌고 경찰들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

(3면으로)

올해 5월 1일은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주년 표기는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전태일 정신 훼손한 인사가 제기한 주년 논쟁

올해 5월 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대부분의 언론도 올해 세계노동절을 제134주년으로 칭하지만,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세계노동절 대회명은 '2024 세계노동절대회'로 정해졌다. 수년 전에 세계노동절 대회 주년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논쟁이 제기되어 그 뒤로 주년 표기를 삭제한 결과이다. 이 주장을 제기한 대표적 인사가 최근 전태일 열사를 앞세우며 불안정·비정형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의 책임이 노동계급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석호이다.

올해를 134주년 세계노동절로 계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세계노동절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싸웠던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1886년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게 셈하면 올해는 138주년 세계노동절이 된다. 이들은 혼란이 있으니 아예 주년 표기를 삭제하고 연도로

만 표기하자고 요구해 그 결과로 현재 민주노총의 세계노동절대회명이 나오게 되었다.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주년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노동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노동계급 운동(세계노동절)은 189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00주년은 1990년에 기념해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많은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1890년 5월 1일을 첫 세계노동절로, 1891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 1주년으로 삼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주년 표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세계노동절의 기원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거리감이 놓여 있다. 한석호의 주장과 민주노총의 혼란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이 쟁점은 이미 130년 전에도 제기되었다. 제2인터네셔널이 1890년 5월 1일을 동시 국제 시위의 날로 정한 것은 미국노동연맹이 그 날 파업하

기로 정한 결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정작 이들은 이 해에도 성조기를 들고 미국 국기를 불렀다고 전한다. 이후 미국노동연맹은 자신들이 '1890년 5월 1일'과 연결되는 일을 피하고자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Labor day)로 정하자고 청원했다. 미국노동연맹이 자신의 보수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여 반공주의를 표방하기에 이른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다.

민주노총이 '1890년 5월 1일'의 계승을 명시하지 않게 된 것이 세계노동절을 노동절로 축소하고자 했던 시도와 상통하는 일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아예 주년을 빼고 연도만 표기하자는 주장은 세계노동절의 역사를 현재와 분리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세계노동절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했던 130여 년 전 노동운동의 이상을 되새기며 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은 2024년 세계노동절이 아닌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 전역에 노동탄압 광풍이 몰아닥쳤다. 사건 이후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8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8명 중 6명은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조차 않았지만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폭동교사 및 살인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 중 4명이 1887년에 처형당했다. 모두 국제노동자협회 소속이었다. 노동단체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혀 해산당하거나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은 사회주의 운동

우리가 기념하는 세계노동절의 직접적인 기원은 1890년 5월 1일이다. 프랑스 바스티유 함락 100주년을 맞아 1889년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사회주의)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는 20개국의 대표자 391명이 모여 "(1890년 5월 1일에) 모든 국가와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일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 시위를 조직"한다고 결의했다.

1890년 5월 1일이 되어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일을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고 특히 유럽에서 성공적이었다.



1890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열린 첫 세계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

그러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의 결의는 1886년의 미국 노동운동을 기리는 국제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1890년 5월 1일은 목요일로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대회가 성사되려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반사회주의법」이 존재하던 독일처럼 노동자의 정치적 행동이 엄격히 제한된 나라도 있었다. 4년 전 미국에서와 같이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각국의 노동자들이 한날한시에 단결된 행동에 나선다는 경험도, 보장도 없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매년 반복할 국제기념일의 제정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여건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5월 1일 투쟁을 기권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을 넘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1890년 5월 1일의 대회가 성사되었을 때 당시의 노동운동가들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지를 떠올려 보라! 자신감을 얻은 각국 노동운동 대표자들은 1891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인터내셔널 두번째 총회에서 1890년의 국제 시위를 기념하는 세계노동절 대회를 매년 5월 1일에 개최하기로 정했다.

한국에서의 세계노동절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세계노동절 대회가 개최되었다. 조선 최초의 세계노동절 행사는 1923년 5월 1일 장충단에서 열렸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요구하며 파업했다. 1946년 5월 1일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도로 해방 후 첫 세계노동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20만 명의 노동자가 운집했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을 거치며 세계노동절은 날짜도, 이름도 빼앗겨 버렸지만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날짜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름을 되찾지 못해 관공서는 세계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칭한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었던 메이데이 이주노동자 · 이민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세계노동절 정신

1880년대 미국 시카고는 산업이 발달하며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던 도시였다. 1870년에 이미 시카고 인구 중 절반 가까이는 유럽에서 건너 온 이민자였다.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아래의 법정 최후 진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스피이스(August Spies)도 독일 이민자였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헤이마켓 사건으로 스피이스와 함께 사형당한 아돌프 피셔(Adolph Fischer), 게오르그 엔겔

(George Engel)도 이민자였다. 시카고에서 메이데이 투쟁을 주도했던 국제노동자협회는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조직으로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노동을 지향했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이민자들이 백인-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반감이 높았다.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경계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비슷했다. 헤이마켓 사건 이후 불어닥친 전국적 탄압은 메이데이 투쟁을 주도한 세력이 이민자 집단이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있다. 지배계급은 빨갱이 이민자가 폭탄 테러를 벌였다고 선동했고, 총파업의 열기를 급속도로 식었다. 체포된 8명의 노동운동가도 혐오 광풍 속에서 증거도 없이 재판받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다. 만약 헤이마켓 사건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예를들어 아랍계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최근 한국

사회가 이민자에게 보이는 배타적 태도에 비춰 보면 130여 년 전 미국에서 불어닥친 혐오 광풍보다 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의 과제이다.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이주민 혐오 정서는 노동운동 내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주축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와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고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

시절이 혼란해도 노동운동이 견지해야 할 입장은 1890년이나 지금이나 명료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스피이스'로 잘못 불리고 있는 '스피이스'의 이름도 되찾아주자. 독일 이민자였던 스피이스의 이름을 올바르게 돌려주는 일은 1886년 메이데이가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다.

태영건설의 노조파괴 집단해고

리사이클링타운 노동자 투쟁은 공공성 지키는 투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일 하던 노동자 11명이 집단해고 당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리사이클링타운 민간투자사업(BTO)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이 자기들 멋대로 운영사를 바꾸는 탓에 노동자들만 느닷 없이 소속이 바뀌며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이번 해고도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만 골라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터무니 없는 쫓수는 전주시가 회사의 불법을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은 전문운영사가 맡아야 하고, 운영업체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체 입찰하며 내세운 전문운영사는 에코비트(구 TSK워터)였다. 이외의 업체가 리사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것은 실시협약 위반이며 협약 해지 사유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 운영사 변경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가 외부에서 음식물 폐수를 반입해 수익을 얻어도 눈감아줬고, 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지 않았다. 시설 대수는 출자자들의 책임이지만 전주시가 세금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공재산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는 민간투자사업 자체에서 비롯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망가지든,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 악취가 발생하든 아랑곳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렸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이유는 노동조합이 공공재산으로 사익을 챙기는 태영건설 및 출자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문제점을 들춰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직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

리사이클링타운의 소유권을 전주시가 갖고 있는 만큼 이 시설은 전주시민 모두의 재산이다. 공공재산을 무자격 업체에게 넘겨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태영건설과 이를 지원하는 전주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리사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이자 공공재산을 지키는 투쟁이다.

對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전북자치도도 이스라엘 교류 사업 멈춰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지 반년이 지났다. 사상자는 10만 명을 넘고 이 중 70%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가자지구 주요 도시에서 병원, 학교를 가릴 것 없이 폭격이 이어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폭격을 피해 피란한 난민 캠프에도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다. 수 천 명 이상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에게 강제 구금하고 구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가자지구에서 집단 매장 시신이 발견되자 줄곧 이스라엘을 옹호해 온 미국조차 이스라엘의 설명을 요구할 지경이다.

한국정부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조약은 전쟁범죄에 지원되는 무기거래를 중단하도록 정한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전쟁 발발 이후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한이스라엘대사를 만나 이스라엘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의 학살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From the river to sea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Palestine will be free!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 미군 활주로 사업 중단!

새만금위원회는 2021년에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횟수를 하루 2회로 늘리고, 그 결과에 바탕해 2024년에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면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올 것처럼 떠들어 댄 것이 30년 쯤이다. 그러나 새만금 일대에 꾸준히 토목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북은 경제 규모와 인구가 줄어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면서 정작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의미 없이 쏟아 부은 돈만 4조 원이 넘는다.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안은 상시해수유통이다. 내부 매립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미군기지 제2활주로 사업인 신공항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새만금 토목사업에 노동자·민중의, 전북의 미래를 저당잡히지 말자.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전북 발전이다.